6·13 지방선거 D-1

'선거공약서' 외면하는 호남 후보들

6·13 지방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후보자 상당수가 '선거공약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물과 선거공약집과 중복되는데다, 일부 후보는 비용 측면이 겹치면서 권고사항인 선거공약서 작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전락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공보물 외에 별도로 배포할 수 있는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해 대부분 후보자가 선거공약서 작성을 외면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시장 후보 4명, 전남지사 후보 5명 등 9명 모두가 '선거공약서'가 없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 후보 14명 중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인 민주평화당 이정현, 무소속 장성수 후보 등 2명만이 선거공약서를 만들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어룡동 제7투표소 선운초등학교 1층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지역 22개 시장, 군수 후보 73명 가운데는 7명만 선거공약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장성 더불어민주당 윤시석 후보를 비롯해 구례 민주당 김순호, 무소속 전경태, 해남 평화당 명현관, 무안 평화당 김호선, 무소속 김재훈, 신안 평화당 정연선 후보 등이다.

TV토론회 보이콧에 이어, 선거공약서 부재와 관련, 일부 후보가 정책대결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에서는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공보물과 후보별 5대 공약이 제시된 상황에서 '선거공약서'는 중복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부 후보는 선거공약집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에 접어들자, 바람몰이, 네거티브 선거전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전에 여야 후보 모두 선거공약서를 외면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한 광역단체장 후보측 관계자는 "공보물에다, 선거공약집까지 마련했는데, 선거공약서를 또 만든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6·13지방선거를 5일 앞둔 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고 있는 파란색 점퍼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선·장휘국·최영태 광주시교육감 후보, 고석규·오인성·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후보. /뉴시스

'학원 휴일 휴무제' 찬성 vs 무응답 팽팽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들

"시민 궁금한 사항 답변해야" 지적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0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37.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 광주시교육감 후보 중 장휘국, 최영태 후보는 찬성했으나, 이정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고석규 후보가 찬성했고, 오인성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장석웅 후보는 입장이 불분명했다.

학원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광주시교육감 후보들 중 장휘국, 최영태 후보는 찬성했고, 이정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전남은 고 후보가 찬성했고, 장 후보는 불분명, 오 후보는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를 제출하겠느냐'는 질문에 광주에서는 장 후보와 최 후보가 찬성했고, 이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고 후보와 장 후보의 입장이 불분명했고, 오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시민포럼은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영업 단축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요구임에도 지난 시기 교육감들이 학원집단의 압력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로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감 선거 후보가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며 "후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시 **지하차도 23곳 안전사고 예방대책 논의**

광주광역시는 오는 14일 상반기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지하차도 23곳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지하차도 현황, 관리 실태 분석 등을 통해 각종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안전관리자문단은 토목시공, 토질·기초, 공동주택,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각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재난취약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지원과 각종 안전대책 자문 등 재난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35곳, 해빙기 취약시설(대형공사장 등) 26곳, 국가안전진단 관련 의료기관·전통시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진도 울금주식회사 파산 '괴소문' 해명

"울금사업 문제없어… 생산·판매 활발할 것"

진도군은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진도 울금 사업과 관련해 파산하지 않았다"고 11 밝혔다.

진도군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도 울금 사업이 파산되어 앞으로 경매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악성 루머는 진도울금주식회사 대표의 사임과 관련해 울금 수매 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울금식품가공사업단에서 '2017년산 수매자금 지급 실행 불가능 안내'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안내문은 진도울금주식회사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와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매 대상 농가들에게 올해 5월말까지 지급을 약속한 수매대급 지급을 해결하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 이사직을 지난 5월 말 사임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주민들은 대표 이사 사임이 곧 진도울금주식회사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진도울금 사업단이 파산한다'는 괴소문이 지역에서 확대돼 재생산됐다.

울금 /유토이미지

이에 따라 진도울금주식회사는 지난 7일 입장 자료를 발표하면서 "진도 울금 사업은 지금 파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도울금식품사업단은 올해 하반기 울금 정부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진도 울금 생산·가공·판매를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인 울금 수매 자금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광주·전남 **"공공·산업 '블록체인' 적극 활용을"**

광주·전남 공공·산업 부문 스마트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정보센터는 11일 '광전리더스 INFO(인포)'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과 주요 산업 부문 고도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선관위 전자투표 시스템, 외교부 전자문서 발급 인증시스템, 농식품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서울 노원구의 지역 화폐 노원 등 중앙·지방정부 블록체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광주·전남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공·산업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스마트시티 공유경제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유휴자산 공유 규모를 확대하고 기부, 지역작가 작품관리 시스템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 나주=김남중 기자

꽃 물든 담양 '죽림서원'

전남 담양군은 담양에서 최초로 문중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곳인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재조명하는 '죽림서원 학술대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담양군 고서면 문예회관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담양군 고서면 죽림재에 자리 잡은 죽림서원의 모습. /연합뉴스

보성군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전략 박차**

보성군은 지역특성이 담긴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추이, 전망 등의 분석을 통한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전략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군에 따면 최근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소장,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성군 인구정책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용역사인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인구의 중요성, 미래 인구추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제안과 저출산, 교육, 문화, 산업경제 등 분야별 각 부서의 인구정책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오는 7월까지 시책화 가능성과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확정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문쌍환기자